

2005年 8月

教育學碩士(一般社會教育專攻)學位論文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전략산업의 발전방안

-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一般社會教育專攻

宋 世 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전략산업의 발전방안

- 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 -

*A Development Plan on Major Strategic Industry
for the Local Economy Activation
-- Focused on Gwangju and Chonnam*

2005년 8월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一般社會教育專攻

宋 世 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전략산업의 발전방안

- 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 -

指導教授 홍 금 우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學位 申請 論文으로 提出함

2005年 4 月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一般社會教育專攻

宋 世 英

宋世英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朝鮮大學校 教授 (인)

審査委員 朝鮮大學校 教授 (인)

審査委員 朝鮮大學校 教授 (인)

2005年 6 月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2005年8月

教育學碩士學位論文

地方經濟活性化를

위한

核心戰略產業의

發展方案

宋

世

英

목 차

목 차	i
표목차	iii
ABSTRACT	iv
제 I 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2
제 II 장 지역경제 활성화와 핵심전략산업에 관한 이론적 고찰	3
제1절 지역경제활성화 개념과 지역개발 현황	3
1. 지역경제활성화의 개념	3
2. 지역개발 관련 주요제도 현황 및 정책방향	4
1) 지역경제를 위한 주요제도 현황	6
2) 지역개발계획의 의한 지원	12
3) 최근 신규사업 및 향후 과제	15
제2절 핵심전략산업의 개념과 그 대책	21
1. 핵심전략산업의 개념과 필요성	21
1)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방법	21
2. 핵심전략산업이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	22

제Ⅲ장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전략산업의 현황	
(광주·전남의 경우)	23
제1절 광주·전남 지역경제 핵심전략산업의 현황	123
1. 광주·전남 지역경제 현황	24
2. 광주·전남지역의 재정 지원 상태 현황	25
3. 현재 광주·전남지역의 핵심전략산업 현황	28
4. 현재 개발촉진지구(전남지역) 사업 현황	30
제2절 광주·전남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방안 제시	31
 제Ⅳ장 광주·전남 지역경제 핵심전략산업의 비전	 33
제1절 지역경제 핵심전략산업 발전 비전	33
제2절 지역경제핵심산업 발전 전략	34
제3절 핵심전략산업의 한계와 과제	36
1. 핵심전략 산업 육성방안	36
2. 비전실현의 한계와 과제	39
 제Ⅴ장 결 론	 40
 참 고 문 헌	 42

- 표 목 차 -

<표1>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비교	3
<표2> 지방재정조정제도 현황	7
<표3> 우리나라의 예산구조	7
<표4>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한 시도별 지원금액1)	8
<표5> 조세에 의한 주요 지원제도	10
<표6> 금융에 의한 주요 지원제도	11
<표7> 수도권 규제 및 비수도권 규제완화의 주요 내용	12
<표8> 주요 지역개발제도 개요	13
<표9> 10대 광역권 개발 현황	14
<표10> 특정지역 지정 또는 검토중인 지역	15
<표11> 기존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 및 한계	16
<표12>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위한 주요 지원내용	17
<표13> 7개 산업단지의 현황과 향후 혁신클러스트화 방향	19
<표14> 지역별 경제활동 인구	26
<표15> 광주·전남 산업구조	27
<표16> 광산업 육성을 위한 중점사업	37

ABSTRACT

*A Development Plan on Major Strategic Industry
for the Local Economy Activation
-- Focused on Gwangju and Chonnam*

Se-young Song

Supervised by Prof. Keum-Woog Hong

Major: General Social Scienc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Korea, the social infrastructure in these days, proves its worth through the local self-government founded on the rock. The operation of the local self-government will change most of the parts from the decentralization of authority to the balanced development among the local cities to the activation of the local economy. Especially, after the operation of the local self-government, so many local communities are trying to promote the local economy. But, there are a lot of problems in the local economy such as fragility of the local finance, deepening of the financial unbalance among the local self-governments, the lack of efficiency on the change, and the local self-governments, the lack of efficiency on the central government and also it is short of capital and technique for development. The demands of local citizens and the expectations which the local citizens have in their mind, gave increased since the local self-government to meet the demands and expectation. Because the local finance is not sufficient enough.

These reasons are as follows. (1) scantiness of the local finance (2) unelasticity of the local finance. (3) poorness of the independent. funding resources. (4) problems of the local financial adjustment system.

The Activation of local economies is not only one strategy for solving this problem but also relation the value of it purpose in itsdlf. It is not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prosperity of once region depends on the activation of local economics under the local autonomy system.

Accordingly, local government should make an effort to activate local economies first of all era of localization.

As the scheme for the activation of local economies, local government will have to support local industries(local small business, regional specialized industries, high-tech industries), that occupying the most important portion of local residents through the expansion of employment opportunity and the increase of their income.

As the local government scheme for the support of local industries, these are following : The role should be shared and redefined by government activity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information network and the industrial-education-laboratorial linkage system should be attracted into the locality, and manpower should be provided for them.

제 I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여년 동안 수출주도형 공업화라는 불균형성장전략과 특정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성장거점개발전략을 추진하여 고도의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특정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산업이 편중화되는 현상을 유발시킴으로써 지역간 격차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의 하나가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이며, 완전한 지방자치제 하에서 지역경제활성화는 지방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지역주민의 취업기회 확대 및 소득증대로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의 확충 등의 효과를 발생시키며, 이는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준다.

본 연구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 핵심전략산업의 필요성과 대책에 대해 연구함에 있어서 그 초점을 지방정부의 지역산업육성정책에 두었다.

지방정부는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그리고 첨단기술산업의 지방유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지방산업육성을 통해서 수행해야 할 역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지역경제와 관련된 정책계획 및 집행권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기능재배분이 요구된다.

둘째, 지역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경제관련 행정조직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을 확보 · 양성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지원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넷째, 지역정보네트워크를 구축 및 산 · 학 · 연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을 통

한 기술개발에 지원하여 한다.

다섯째, 지방정부는 외국기업의 투자 및 기업유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현대의 대내외적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산업육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핵심전략산업과 지역개발 관련된 주요제도 현황과 비전을 제시하여 그에 대한 대책방안을 연구하여 지역경제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본 논문은 내용적 구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일련의 상호연관된 세 가지 연구내용을 다루고 있다.

첫째, 지역경제활성화의 개념, 필요성, 조건을 연구함과 동시에, 지역경제활성화의 전제조건이 되는 핵심전략산업을 위한 선정방법과 전략산업 목적의 필요성을 연구하고, 지역산업육성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을 고찰하였다.

둘째, 광주·전남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전략산업을 제시하여 광주·전남의 지역경제 현시점과 지역의 재정지원 상태 현황을 파악하여 광주·전남지역의 핵심전략산업의 방향과 지역경제활성화의 대책 방안을 간구하였다.

셋째, 광주·전남지역경제 핵심전략사업의 현황과 비전을 제시하여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함에 있어서 앞서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지역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지역특화산업 육성정책, 지방중소기업 육성정책, 첨단기술산업 지방유치 및 육성정책에 대해 연구하였다.

제Ⅱ장 지역경제활성화와 핵심전략산업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지역경제활성화 개념과 지역개발 현황

1. 지역경제활성화의 개념

지역경제¹⁾란 경제의 공간적 질서(spatial order of economy)를 뜻하며 일정한 지역공간상에 최소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생산, 교환, 소비의 경제활동을 의미하면서 지방주민의 생존을 가능케 하는 젖줄이고 주민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이자 결과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라 함은 “지역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킨다”는 의미와 “인구이동과 관련하여 그 지역의 주민 되도록 그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정주기반을 확대시킨다”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표 1>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비교

구 분	지역경제	국가경제
공간적 범위	분할된 국가의 각 지역	국가전체
경제의 외부환경	국가경제	국제경제
계획의 대상	공간중심	물량중심(산업구조)
정책적 기초	복지증진	경제성장
개발방식	균형개발	거점개발
개발규모	소규모	대규모

따라서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본적인 목표는 지역의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1) 김기덕,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98), pp.6-7.

개선시켜 고용기회를 창출시킴으로써 지역의 생산성과 주민소득을 증대시키고 이와 병행하여 사회간접자본 확충, 지역간 상호교류증대, 지역중심 기능축적, 지역문화성 확보 및 유능한 지역인재를 확보하고 지역기업가를 발굴·개발·육성하여 지역산업을 성장시킴으로써 지역정주기반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란 ① 지역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킨다는 의미, ② 인구이동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가능한 그 지역 내에 정주할 수 있도록 정주기반을 확충시키는 의미, ③ 지역의 산업구조를 개서하고 다양화함으로써 주민의 고용기회를 창출 내지 제고시키고 지역의 생산성과 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의미, ④ 사회간접자본, 지역간 상호교류 증대, 지역중심 기능의 축적, 지역인재 및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여 지역산업을 성장시킴으로써 지역정주기반을 확대한다는 등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다.²⁾

2. 지역개발 관련 주요제도 현황 및 정책방향

각 지방 내에서도 여러 산업이 활동하고 있지만, 여러 산업 중에서도 육성하고 싶은 산업 많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산업도 있다. 이런 지역특화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지역특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별로 당해 지역의 특화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지역특화산업이 갖추어야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³⁾

첫째, 지역성이 높아야 한다. 지역성이란 지역 내 산업 중 그 지역을 상징

2) 최유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1997), 연구보고서 95-09, pp. 5-7.

3) 김기덕,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98), pp. 80

할 수 있고 전통성이 어느 정도 있어 특정지역과 특정상품이 연상 될 수 있는 산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 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산업연과효과가 커야 한다는 점도 포함된다.

둘째, 지역 내 부존자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산업이어야 한다. 이 부존자원에는 지역 내 자본과 기술, 자연자원, 인력자원 뿐만 아니라 문화자원까지 의미하는 바, 이들 자원을 가장 잘 이용할 수 있을 때 타 지역에 판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특화산업이 다른 산업보다 수익성이 높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높은 수익성은 가격 및 비가격 경쟁을 갖추었을 때 보장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높아야 한다.

넷째, 지역 내 다른 산업부분보다 가능한 성장 속도가 빠른 산업이어야 한다. 생산액의 측면 뿐만 아니라 고용측면에서도 다른 산업보다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는 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다섯째, 지역특화산업은 해당 지역의 지역개발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는 산업이어야 할 것이다. 해당 지역의 지역개발계획과 가장 부합되고, 지역개발의 목표를 수렴할 수 있는 산업이어야 한다.

여섯째, 지역의 환경오염을 가장 적게 야기하는 산업이 선정되어야 한다.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해도, 지역의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면, 그 지역의 삶의 질은 저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명확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는 지역특화산업의 선정 시 우선, 각종 상위계획의 검토가 사정에 이루어져야 한다. 상위계획에서 지양하고 있는 사업의 선정 시에는 육성이 곤란하고, 상위 계획과 가장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 할 경우 특화산업의 육성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지역의 산업구조분석과 해당 자지단체에서 정말로 육성하고 싶은 산업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정책적인 고려도 작용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본적인 목표는 지역의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개선시

켜 고용기회를 창출시킴으로써 지역의 생산성과 주민소득을 증대시키고, 이와 병행하여 사회간접자본 확충, 지역 간 상호교류 증대, 지역중심 기능 축적, 지역문화성 확보 및 유능한 지역인재를 확보하고 지역 기업가를 발굴 · 개발 · 육성하여 지역산업을 성장시킴으로써 지역정주기반을 확대하는 것이다.

1) 주요제도 현황 파악

2003년 2월 출범한 참여정부는 인구 및 경제활동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을 중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라는 원칙 하에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간 불균형에 의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실현코자 한다

과거 다양한 균형발전시책이 연계 · 조정 · 통합되지 못하고 여러 사업 주체에 의해 산발적으로 추진됨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고 종합적 · 체계적 접근에 의한 지방화를 통해 국가 선진화 전략을 추진하였다.

노동, 자본 등 물량위주의 요소투입형 경제발전에서 벗어나 지방경제를 혁신주도형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지역 내부의 역량을 강화하였다.

먼저, 지역개발과 관련된 현행 주요제도를 파악해 보자.

(1) 재정에 의한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체재원의 부족함에 따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⁴⁾ 등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해 중앙정부가 부족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다.⁵⁾

다음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 현황을 보면

4) 이와 별도로 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양여금 제도를 운영(지방양여금 및 지방교육양여금 제도는 2005년 폐지 예정)

5)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인 재정자립도는 특별시 및 광역시가 81.4%, 9개도가 41.3%, 77개시는 38.8%, 88개군은 16.6%로 평균 57.2%에 불과하다.(2004년 예산 기준)

다음과 같다.

<표 2> 지방재정조정제도 현황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근 거	지방교부세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에 관한 법률	· 지방양여금법
목 적	· 지자체 재원 보강 · 재정불균형 완화	· 국가시책 및 지자체 특정사업 지원	· 지자체 재정기반 확충 ·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재 원	· 내국세 총액의 15%	·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계상	· 주세 전액 · 교통세의 14.2% · 농어촌특별세 전입액
배분방법	· 지방자치단체별 기준 · 재정부족액 기준	· 대상사업별 국고보조율 적용	· 대상사업별 법적 배분비율 적용
운 영	· 일반재원 (용도 비지정)	· 특정재원 (용도 개별지정)	· 포괄적 특정재원 (용도 포괄지정)
지방비 부담	· 없음	· 의무사항	· 권고 사항
긍정적 효과	· 지방재정의 자주성, 계획성, 형평성 제고	· 특정부문 지출증대 · 징세노력 제고	· 특정부문 지출증대 · 지방재정의 형평성 제고
부정적 효과	· 지자체의 징세노력 저해	· 지방지정의 자주성, 계획성 저해	· 지자체의 책임성 저해

우리나라 당초예산 기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총예산(87.3조원, 2004년 기준)중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한 지원자금(29.4조원)은 34%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총예산구조를 살펴보자.

<표 3> 우리나라의 예산구조⁶⁾

총예산(246.7조원)							
중앙정부 (159.4조원)		지방자치단체 (87.3조원, 34%)					
		자체재원(57.9조원, 66%)			의존재원(29.4조원, 34%)		
국세	기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	교부세	보조금	양여금
(122.1조원)	(37.3조원)	(32.0조원)	(23.2조원)	(2.7조원)	(12.7조원)	(11.9조원)	(4.9조원)

6) 2004년 총예산(특별회계 포함), 순계, 당초예산 기준
 자료 : 행정자치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04. 3

이와 같이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한 16개 시도별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원, 전남·북, 경북, 충남·북, 제주 등의 순으로 지원비율이 높다. 시도별 지원 금액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한 시도별 지원금액¹⁾

(단위:억원)

재 정	자립도	교부세	보조금	양여금	소계	총 예산 ²⁾
	(%)					
서울	95.5	28(0.0)	8,040(5.3)	- (-)	(5.3)	152,440(100.0)
부산	75.6	1,371(2.9)	6,597(13.7)	1,106(2.3)	(18.9)	48,088(100.0)
대구	73.2	1,431(4.4)	5,946(18.3)	1,031(3.2)	(25.9)	32,462(100.0)
인천	75.9	1,138(3.1)	4,186(11.5)	758(2.1)	(16.6)	36,542(100.0)
대전	74.4	764(4.1)	3,543(19.1)	489(2.4)	(25.9)	18,515(100.0)
울산	69.6	851(6.1)	1,659(11.8)	945(6.7)	(24.6)	14,060(100.0)
광주	59.8	1,402(7.0)	3,863(19.3)	482(2.4)	(28.7)	19,991(100.0)
경기	78.8	8,015(4.7)	13,563(7.9)	5,523(3.2)	(15.8)	171,314(100.0)
강원	28.9	14,941(34.9)	6,961(16.2)	5,049(11.8)	(62.9)	42,863(100.0)
충북	31.3	9,890(29.8)	5,507(16.6)	3,278(9.9)	(56.2)	33,203(100.0)
충남	30.5	13,299(26.7)	9,329(18.7)	4,553(9.1)	(54.6)	49,816(100.0)
전북	25.9	13,924(30.9)	9,202(20.4)	4,495(10.0)	(66.3)	61,043(100.0)
전남	21.1	20,268(33.2)	13,953(22.9)	6,253(10.2)	(66.3)	61,043(100.0)
경북	29.4	20,328(32.4)	11,151(17.8)	6,449(10.3)	(60.5)	62,704(100.0)
경남	38.3	15,526(22.9)	11,739(17.3)	6,464(9.6)	(49.8)	67,669(100.0)
제주	34.7	3,754(22.0)	3,308(19.4)	1,671(9.8)	(51.2)	17,045(100.0)
계	57.2	126,939(14.5)	118,546(13.6)	48,546(5.6)	(33.7)	872,840(100.0)

1) 2004년 당초예산 순계 기준 2)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포함

3) ()내는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①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재정의 결함이 생기는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지방교부세법 제1조 및 제2조)으로 원칙적으로 용도 제한이 없는 일반재원의 성격을 가진다.

종류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한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초 행정업무를 영위하는 데 필요한 보전금으로 용도 제한이 없어 해당 지자체의 일반재원으로 활용된다. 교부세 총액의 10/11을 재원으로 하여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 수요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한해 교부(지방교부세법 제4조 및 제 6조) 한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재정수요나 각종 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재정수요 발생에 대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시책사업수요, 재정보전수요, 재해대책수요, 특정현안수요 등 5개 분야) 교부세 총액의 1/11을 재원으로 시행형에 의해 재정수요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에 교부한다.

② 국고보조금

정책적 필요에 따른 국가시책사무와 국가위임사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재원(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법률 제2조)으로 용도가 개별 지정되는 특별재원이다.

종류는 협의의 국고보조금, 국고부담금, 부담금 등으로 구성된다.

협의의 국고보조금은 국가 시책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원하는 경비(예: 지하철 건설,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농공지구 조성 등)이고, 국고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경비 중 국가의 책임 정도에 따른 국가 부담분(예: 전염병 예방, 재해복구사업 등)이며, 부담금은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임함에 따라 전액 부담하게 되는 경비(국민투표, 국회의원 선거 등)이다.

③ 지방양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세중 특정세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세수입을 공유한다는 점에서는 교부세와 유사하며 특정사업수요에 충당하도록 용도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서는 보조금과 비슷하다. 다만, 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이 국고보조금의 대상사업에 비해 규모

가 크거나 중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포괄보조금적 성격을 가진다.

(2) 조세에 의한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에 의거 지방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등 직접적 방식으로 지원된다. 지방 이전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경감세율 적용 등을 통해 지역개발을 촉진시킨다. 반면 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중과, 감면규정의 적용 배제 등을 통해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수도권 집중을 억제한다.

<표 5> 조세에 의한 주요 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 법인 및 공장의 지방이전시 법인세 과세이연 및 양도차 익의익금 분산임	·법인 및 공장의 지방이전시 취득 세, 등록세 등을 면제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원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 한 법인세 미 소득세 감면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 한 조세지원	·산업단지 등의 입주기업 및 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해 취득세 ,등록 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감면
외국인투자기 업에 대한 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 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	
수도권 기업 규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의 세액감면 배제 ·신규·증설 투자 시 세액공제 배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중과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록세, 재산세의 감면 배제

(3) 금융에 의한 지원

금융에 의한 지원제도는 크게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및 신용 보증기관에 의한 지원으로 구분된다.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중앙정부는

지역산업 진흥, 산업인프라 구축, 산업단지 개발 등을 위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 육성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대출제도를 운영한다.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관도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대출 및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표 6> 금융에 의한 주요 지원제도

	지원 기관	지원 자금	주요내용
중앙 정부	산업자원부	·산업기반기금 융자제도	· 지역산업 진흥사업 지원 · 산업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산업단지 지원제도	·비수도권 소재 산업단지의 분 량·개발 촉진
지방자 치단체	각 지자체	·중소기업 육성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금융 기관	한국은행	·지역본부별 총액한도대출	·중소기업대출 확대 및 지방중 소기업 지원
	산업은행	지역균형발전 지원펀드	지역전략산업, 특화산업 및 지 방중소기업 지원
	우리은행	소상공인 특별대출	서울 및 경기 지역 소재 재래 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 지원
	부산은행	전략사업 육성자금 대출	부산시 전략산업 지원
		소기업 대출	부산, 울산, 경안 지역 소재 소기업 지원
경남은행	SMBA & KNB 하나로 대출	·경남 및 울산 지역 소재 중소 기업 지원	
신용 보증 기관	신용보증기 금	지방 이전기업 특례보증	지방이전기업 지원
	기술신용보 증기금	지역특화산업 지원제도	지역특화산업 지원
	지역신용보 증재단	신용보증제도	지역중소기업 지원

(4) 차별적 규제의 의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반면

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였다.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해 규제특례를 적용하며 산업단지 개발시 개발비용을 보조하고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였고, 또한 지방 이전기업의 국공유지 임대 시 임대료 감면하였다.

수도권의 대해서는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 금지, 대학의 신설 및 증원 억제, 대형건축물에 대한 과밀부담금 부과, 대규모 개발사업 제한 등을 통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각종 개발행위를 규제하였다.

<표 7> 수도권 규제 및 비수도권 규제완화의 주요 내용

	주요 내용
비수도권 규제완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적용 ·산업단지의 일부 개발비용을 전액 보조하고 개발부담금을 면제 ·소기업의 공장 신·증축 및 지방 이전시 개발부담금 등 면제 ·지방 이전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지역사회 개발 등 일부 특수한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등
수도권 규제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증설, 대규모 개발사업 등을 제한 ·서울특별시 지역의 대형건축물 건축시 과밀부담금 부과 ·공장 건축 및 대학 증원의 총허용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신·증설 및 증원을 규제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 금지, 중소기업 공장은 업종·규모에 따라 제한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

2) 지역개발계획에 의한 지원

(1) 개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특별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한다. 광역권 및 특정지역과 개발촉진지구 등 낙후 지역을 지정하여 개발한다. 농어촌 거점지역인 지방 소도읍과 산업생산실적이 미흡한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별도 지원한다.

〈표 8〉 주요 지역개발제도 개요

주요지역	주요내용	근 거	소 관
광역개발권역	·지방의 대도시권 및 신산업지대 육성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건설교통부
(제주국제자유도시)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주도
특 정 지 역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고특정산업을 육성	·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건설교통부
낙 후 지 역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발촉진지구	·개발수준이 현저히 낮은 지역의 개발촉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건설교통부
(폐광지역)	·폐광지역 진흥	·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지원부
오 지	·오지지역 소득 및 복지 증진	·오지개발 촉진법	행정자치부
도 서	·도서지역 소득 및 복지 증진	·도서개발 촉진법	행정자치부
접경지역	·접경지역 소득·복지 증진 및 자연환경 보전 조성	·접경지역 지원법	행정자치부
신활력지역	·낙후지역의 지역혁신역량 강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행정자치부
지방소도읍	·지방 소도읍 육성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행정자치부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조업 입지 및 생산이 부진한 산업단지 지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청

(2) 제도 현황

① 광역개발권역

지역특성에 맞는 자립적인 지역경제기반을 구축하고 지방의 대도시권과 신산업지대를 수도권의 대응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11년까지 10대 광역권 개발을 추진한다.

〈표 9〉 10대 광역권 개발 현황

광역권		총사업비	개발 방향
대 도 시 권	대전·청주권	33.1조원	자족적이 경제권 육성, 국가 중추권리기능의 수용기반 구축
	광주·목포권	25.4조원	임해형 신산업지대 조성, 중국 등과의 교류기반 구축
	대구·포항권	38.8조원	내륙의 산업거점과 항만을 연계, 환동해권 해양지향형 개발
	부산·경남권	43.6조원	환태평양 경제권 및 동북아 경제권 거점 구축
신 산 업 지 대	아산만권	21.3조원	경인지역 기능 분산 및 서해안 교두보 건설
	군산·장항권	20.3조원	환황해경제권의 중심 치 서해안 개발의 거점으로 구축
	광양만·진주권	30.3조원	신산업지대를 조성하여 남해안 경제의 중심으로 육성
연 담 도 시	강원 동해안	23.0조원	동아시아 관광·후양활동의 중심, 대북 및 환동해권의 경제 및 문화교류 거점으로 육성
	중부 내륙권	-	개발계획 수립중
제주도		29.5조원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

② 특정지역

지역의 역사·문화·경관 자원을 활용하고 특정산업을 육성하는 등의 새로운 지역개발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특정지역을 지정, 개발한다. 유형에는 문화관광권형, 산업전환지대형, 특수입지형으로 구분한다.

첫째, 문화관광권형은 역사·문화 유산의 보전·정비 또는 관광자원 개발 등의 위해 기반시설의 설치, 주변지역의 연계개발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며, 둘째, 산업전환지대형은 주요 사업 및 기반시설의 이전·쇠퇴, 지역의 부존자원 고갈 등으로 새로운 지역경제 기반 구축이 필요한 지역을 말하고, 셋째, 특수입지형은 자연재해 및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항구적인 복구와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나눈다.

이를 구역별 및 개발방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0〉 특정지역 지정 또는 검토중인 지역

특정지역	주요 행정구역	개발방향
내포 문화권*	·충남 서산·보령시, 홍성·예산·태안·당진군	·산재된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하여 복합여가 문화지대로 육성
영산강유역 문화권	·전남 나주·영암일대	·마한문화유적 정비, 관광휴양시설 확충
지리산 통합문화권	·전남, 전북, 경북 일대	·지리산권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적을 연계한 문화생태·관광지를 조성
남해안 관광벨트	·부산, 경남, 전남	·천혜의 해상도시 관광자원을 연결
경북 유교문화권	·경북일대	·안동 하회마을 등 유교문화자원을 활용

* 2004년 12월 특정지역으로 지정 확정, 2005-14년중 총 46개 사업에 총 1조 505억원(국비 4,502억원, 지방비 5,258억원, 민자 745억원) 투자 계획이다.

3) 최근 신규사업 및 향후 과제

(1) 기업도시 건설

① 추진 배경

기업 주도의 자족적 도시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데 있다. 기존 법률에 근거한 산업단지 등의 공공개발방식이 장기 미분양, 정주여건 미비, 입주기업 지원기능 미흡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또한,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21세기 전략산업인 문화·관광·레저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법제도 시급하다.

산업시설은 물론 주거·문화·교육 시설 등 복합적인 도시기능을 갖춘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⁷⁾하였다.

7) 2004년 12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

〈표 11〉 기존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 및 한계

	경제자유구역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도시개발법
도입목적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	·제조업 등 산업활동을 위한 용지공급	·계획적인 도시개발 일반절차
주요내용	·자유구역내 규제 완화, 개발행위 등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절차와 인허가 의제 등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와 인허가 의제 등
적용한계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자유치 제도를 내국인 기업에 포괄적용하기 곤란 ·개발이 아닌 투자촉진 위주의 법령	·공공개발 위주(선산업용지 조성, 후수요기업 모집) ·정주요건을 고려하지 않은 생산기능 위주개발	·일반적인 도시개발 절차를 명시 ·투자촉진과 균형개발을 위한 지원특례 적용에 한계

② 주요 내용

기업도시는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산업, 연구, 관광, 레저, 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민간기업이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

기업도시 종류에는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혁신거점형이 있다.

-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 제조업 교역 중심의 도시
-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 연구개발 위주의 도시(Science Park형)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 관광·레저·문화 위주의 도시
- 혁신거점형 기업도시 :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지역혁신 거점도시

〈표 12〉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위한 주요 지원내용

	지원수단	지원내용
자금 지원 및 조세 감면	재정지원	·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 비용 중 일부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및 관광 진흥기금에서 지원 ·임대부지 조성, 편의시설 설치 필요자금 지원 ·입주기업에 대한 고용훈련비 지급, 시행자와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에 대한 저가 우선공급
	조세 감면	·개발사업 시행자의 법인세, 소득세, 관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입주기업의 구세 및 지방세 감면
	간접적 자금지원	·토지매수대금 지급을 위해 토지상환채권 발행 ·입주기업의 지급을 위해 토지상환채권 발행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비용 상당액을 출자총액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 ·개발구역내 일부 간선시설 설치비용을 지자체가 지원
개발 용지 이용상의 지원	제한적 토지 수용권 부여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50% 이상을 확보시 지자체에게 토지수용업무 수탁요청 가능
	국·공유자 사용상 혜택	·개발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의 저가 매도 및 장기 분할 납부 가능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특례	·개발사업 승인시 매립지·매립예정지 등의 개발계획 용도로 매립목적 변경을 승인
기타 규제 완화	인·허가 등의 의제 처리	·사업계획 승인으로 국토계획, 산업, 에너지, 유통 등 41개 법상 총 88개의 인·허가사항을 의제 처리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시행자가 수립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조기 승인을 위해 심의기간에 대한 특례 인정
	관광진흥을 위한 지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경우 필요요건 충족시 카지노업 허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특례	·학교설립 및 자율운영 등에 관한 특례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 ·의료기관 설립 및 부대사업상 특례 ·체육시설 시설기준의 예외 적용 등 체육시설물 설치 및 이용에 대한 특례 ·주택공급기준 별도 적용 등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2) 지역별 혁신클러스터 육성

① 추진배경

과거 요소투입형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생산성 향상과 혁신 지식·기술의 창출에 의한 경제도약을 위해서는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 산업단지는 연구개발(수도권, 모기업)과 생산(지방)이 분리되어 범용·모방기술 중심의 대량생산지대에 적합하다. 산업단지과 연구개발단지를 통합한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② 추진방향

권역간 형평과 지역의 혁신역량을 고려하여 대덕연구단지 및 7개 산업단지를 혁신클러스터화 하였다.

기존 연구개발단지(1개)로 대덕연구개발단지(충청), 주력산업의 대표 산업단지(5개)호는 구미(전자산업-경북), 창원(기계산업-경남), 울산(자동차산업 - 경남), 군산(자동차산업-전북), 반월시화(부품소재 -경기)가 대표단지이고, 혁신기반이 양호한 초기 산업단지(2개)로는 광주(光산업-전남)과 원주(의료기기-강원)이 대표단지로 추진하고 있다.

〈표 13〉 7개 산업단지의 현황과 향후 혁신클러스터화 방향

	현 황	육성방향
창원 → 첨단기계 클러스터	·주력업종 : 기계(58%) ·우수한 공정기술 및 연구인프라 보유 ·핵심설계기술은 주로 수도권에서 수행 ·국제연구소의 연구역량 활용 미흡 ·중소기업은 지역대학, 연구소와 협력하여 자수준의 기술개발	·차세대 핵심기계 기술개발 ·중소기업 위주의 기계부품기업 혁신 네트워 크 구축 ·중소기업 기계부품단지조성 ·국제연구소의 기능재편 등 (첨단기계, 로봇기술 개발지원)
구미 → 디지털 전자사업 선도	·주력업종 : 전기전자(33%) ·PDP, LCD, 휴대폰 세계시장 점유 ·대기업은 양적 연구인력 확보 ·핵심부품 수입 의존 ·연구소는 생산기능 개선에 주력하고 핵심 기술은 수도권에 집중	·디지털 전자정보집적지 조성 ·맞춤형 기술인력 프로그램 확산 ·우수 기술인력 및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
울산 → 자동차부품 공급기지	·주력업종 : 자동차(33%) ·국내 최대의 자동차 생산기반고 기능인력 보유 ·부품업체의 고부가가치화 역량 부족 ·전문연구소 부재, 대학 부족	·대학, 연구소 및 부품업체간 공동 R&D 강 화(기술연구조합 결성, 부품업체간 이업종 교류 활성화) ·자동차부품 모듈화 종합지원체제 구축, 설 계인력 중점 육성
반월시화 → 첨단부품소재 공급기지	·주력업종 : 기계(43%) ·수도권 소재 대표적 중소기업단지(다양한 중소부품업종이 혼재) ·입주기업의 87%가 영세중소기업 ·혁신자원 풍부 ·대학의 높은 산학의지 보유	·첨단부품소재의 업종별 미니클러스터 조성 ·부품소재 관련 학연산 클러스터 구축 ·첨단기업에 대한 입지공급 확대 ·환경친화적 생태산업단지 조성
광주 → 광산업 클러스터	·주력업종 : 전기전자(53%) ·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단기간 육성 (광산업 비중 : 13.2%) ·관련 인프라 구축은 양호 (국내 유일의 전문연구소 소재, 전국 관공 학 인력의 67% 배출) ·선도기업 부재, 핵심원천기술 부족	·광기술개발 네트워크 구축 (광기술원 중심의 산학연계 활성화, LED 특 성학과 신설 등) ·공공수요 창출 등을 통한 부품업체의 자생 력 확보 ·기술력 보유 선도기업 유치 ·LED 전문단지 조성
원주 → 첨단의료기기 산업거점	·대부분 창업 초기의 영세업체 ·기술혁신센터 설립 등 인프라 구축 ·선도기업 부재, 중소기업 집적	·선도기업 유치 및 신사업 창출 ·의료기기 생산기반 구축 ·의료기기 지원 네트워크 구축
군산 →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주력업종 : 자동차(55%) ·완성차 업체 위주, 부품업체는 영세 R&D 및 생산기반 인프라 취약 ·고부가가치 기술집약산업 주재로 지역경 쟁력이 취약	·산업단지내 기업유치 활성화 ·자동차부품기계 미니클러스터 구축 ·혁신 인력양성, 핵심선도기술 개발 ·생산기반산업의 집적화 지원 ·우수인력의 정주여건 개선 지원

(3) 향후과제

앞으로 향후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확충해야 한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비율을 낮추어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재정적 압박을 완화시킨다.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가 큰 편이므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획일적인 보조율 적용보다는 차등보조율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재정상황이 특히 어려운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산하는 인상보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인하보조율만 적용 될 뿐 인상보조율은 활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보조금보다는 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보통교부세의 증대를 위해 교부세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재원공여 수준을 축소하고 지방세 체계를 소득과세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자주재원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국고보조사업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재정 효율성이 저해되므로 소규모 유사사업을 통합하여 포괄화하고 보조금 배정방식을 개선시켜야 한다.

둘째, 복잡·다기한 지역개발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지역개발제도의 효율성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낙후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제도인 개발촉진지구, 오지, 도서, 접경지역 등을 하나의 제도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앙정부는 광역권 및 특정지역 개발을 담당하고 낙후지역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통해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개발계획 수립,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개발제도의 체계화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지역전략사업, 지역산업진흥사업 등 지역의 특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선정된 산업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역 간 유사산업의 중복으로 이해 예산의 낭비 및 비효율 초래가 우려되므로 지역별 산업정책방향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지방의 자생적 발전기반 구축보다는 국가 산업

정책 추진의 필요성에 근거한 첨단산업 등 신규사업 비중이 과도한 편이므로 지역 산업구조를 감안하여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을 아우르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역연고산업과 연계하여 육성하는 방안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제2절 핵심전략산업의 개념과 그 대책

1. 핵심전략산업의 개념과 필요성

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초기에 한정된 자원으로 국토발전에 나서다 보니 광주·전남지역은 산업발전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서비스산업에 치우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이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투자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지역간 균형발전에 청신호가 커졌다.

핵심산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상대적으로 타 산업에 비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산업을 말한다. 그것은 기업체, 생산액, 고용 측면에서 집적화 되어 특화된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전략산업육성은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적 불균형 해소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목표를 갖고,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과 잠재성을 갖고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지역전략산업은 세계경제의 미래 성장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성장가능이 있는 산업을 지역에서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지니고 있다.

1)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방법

지역의 전략산업의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현재 지역의 핵심산업을 보다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현재는 우리지역에 없지만 미래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

하는 것이다.

첫째, 기존 특화산업을 보다 발전시키면서 기업과 고용의 파급효과가 크며, 첨단기술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산업에 중점을 둔다.

둘째, 지연산업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통하여 자립적 성장의 뿌리내림을 위해 이미 추진중인 기존 전략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셋째, 기존 특화산업이 취약하여 새로운 특화산업의 육성을 초기단계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지역적 현실측면에서 전략적으로 타 지역과 중복되지 않고 보다 전문화되고 특화된 산업화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국가산업정책과 지역의 입지특성에 부합하여야 한다.

전략산업 선정에 있어서 현재의 핵심산업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이유는 첫째, 현재 지역의 핵심산업으로 자리잡기까지는 오래 동안 국가와 지방의 육성노력의 결과이며, 경제발전은 기존 기반에 의해 누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둘째, 기반이 없는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많다. 물론 새로운 분야의 기술과 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존의 특화된 산업을 보다 경쟁력 있게 육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이다.

2. 핵심전략산업이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

전략산업의 육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목적을 가지고 국내외 환경을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을 때 추진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전략산업은 국가 경제성장을 위해서 경공업, 중화학공업, 또는 섬유산업, 전자산업, 자동차산업 등 경제개발과정에서 산업육성의 정책전략이었다. 때문에 당시에는 지역의 특화산업이 국가의 전략산업육성에 의한 결과로서 나타났다. 특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을 입지시킨 것이다. 그 결과 구미 전자산업, 울산 자동차, 화학산업, 광양 제철산업, 여수 석유화학산업 등의 산업이 집적된 도시나 지역이 형성되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의 분권화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역경제에 영향력이 큰 지방 건설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공사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방재정의 지원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또한 징수된 국세를 중앙과 지방간에 일정비율 배분하는 공동세 도입과 국세·지방세간 세목교환을 종합검토하고 지자체의 지역개발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채 인수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제Ⅲ장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전략산업의 현황

- 광주·전남의 경우 -

제1절 광주·전남 지역경제 핵심전략산업의 현황

요즘 각 지역에서 최대 화두는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살리기이다. 물론 중앙정부도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에 정책의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는 국내외적 여건이 과거 고성장시기에 누렸던 환경과 달리 자본의 국경 없는 이동, 세계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 그리고 국민들의 보다 높은 삶의 질에 대한 욕구 등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 위기의 여건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측면에서 지역경제를 선도할 핵심전략산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첫째,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 중시 : 오늘날 기업은 세계 모든 기업과 경쟁하여 시장을 점유한다. 끊임없이 개척하고 관리해야 할 가변적 대상이 바로 세계시장이다. 이는 글로벌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갖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기업과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며 필요한 정책적 전략이 될 수 있다.

둘째, 지역자원의 경쟁력 제고 :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중시한 환경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지역자원이 있어야 한다. 즉 기업, 연구소, 전문인력, 대학, 입지환경, 정책시스템 등 경쟁력 있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자원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적 위기에 놓인 지방은 이러한 경쟁력을 갖춘 자원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 자원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

셋째, 정책 재원의 제한성 : 지역발전은 시장의 자율에 의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광주·전남지역은 오히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과 투자가 어느 지역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제한된 예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크거나 지역의 선도산업을 창출하여 지속적 성장 기반을 만들어 가는 부문에 집중적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의 특화와 브랜드 : 기업은 기업자체의 브랜드가 중요한 것처럼 지역발전에서는 지역브랜드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즉 경쟁력 있는 분야의 산업을 러스터가 지역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창출하고, 관련 산업으로 확산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게 된다.

1. 광주·전남 지역경제 현황

우리지역의 전략사업은 무엇으로 해야 할까? 전문가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현재 지역의 핵심산업을 보다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현재는 우리 지역에 없지만 미래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첫째, 기존 특화산업을 보다 발전시키면서 기업과 고용의 파급효과가 크며, 첨단기술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산업에 중점을 둔다.

둘째, 지역산업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통하여 자립적 성장의 뿌리내림

을 위해 이미 추진중인 기존 전략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셋째, 기존 특화산업이 취약하여 새로운 특화산업의 육성을 초기단계에서부터 시작해야하는 지역의 현실측면에서 전략적으로 타 지역과 중복되지 않고 보다 전문화되고 특화된 산업화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국가산업정책과 지역의 입지특성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산업을 도출하기 위해서 전국대비 비중과 지역 내 비중, 특화도를 나타내는 입지계수(LQ), 전후방 산업연관도(영향력 계수, 감응도계수), 지역경제파급효과(소득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등 정량분석을 통해 현재 우리 지역의 핵심산업이 무엇인가를 찾아본다. 그리고 미래성장성,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정책의지, 타 지역과의 연계성, 지역의 혁신역량(인적자본, 대학, 연구시설의 밀집도 등) 등의 정성적 분석을 통해 성장잠재성이 높은 산업을 도출한다. 특히 미래성장성은 이미 성장산업으로 평가한 미래유망산업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성장성이 높은 산업으로 고려하고, 또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은 정책의지가 높은 산업으로 평가한다.

광주·전남지역의 현재 핵심산업인 자동차, 기계, 가전, 석유화학, 철강 등은 우리나라 주력산업으로서 새로운 첨단기술을 접목하거나 융합화하여 성장유망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으며, 기계, 조립금속, 플라스틱, 소형조선, 비금속, 음식료품 등의 산업은 전통산업이며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신기술 개발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의 유망산업으로 창출해야 한다. 그리고 비제조업 분야로써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은 전통문화의 예향, 문화중심도시건설, 광양컨테이너항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 디자인/문화산업, 관광산업, 물류산업 등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2. 광주·전남지역의 재정 지원 상태 현황

현재 광주·전남의 인구는 약 345만명이며, 이는 전국인구의 7.2%를 차지

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2.9%, 전라남도는 4.3%로 나타난다. 광주시는 1997년에 비해 그 비중이 0.06% 증가하고, 전남은 0.38%가 감소하여 지속적인 인구전출 초과지역이다. 이러한 인구전출 때문에 노령인구 비중이 높아져 이미 노령인구 비중이 14%에 접근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1) 취업기회가 적어 저조한 실업률

현재 광주시 경제활동인구수는 62만명이며, 이는 전국 경제활동인구수의 2.7%고, 경제활동참가율은 57.2%로서 부산과 함께 시·도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실업률은 4.2%로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며, 광역시에서는 가장 높다. 반면 전남은 1차 산업지역이며,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점 때문에 실업률이 1.8%로 낮은 편이다.

〈표 14〉 지역별 경제활동 인구⁸⁾

(단위: 천명)

	15세 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
		계	취업자	실업자			
전국	37,475	23,218	22,425	792	14,257	62.0	3.4
서울특별시	8,020	5,014	4,781	234	3,006	62.5	4.7
부산광역시	2,93	1,664	1,598	66	1,250	57.1	4.0
대구광역시	1,987	1,209	1,160	49	778	60.8	4.1
인천광역시	2,004	1,240	1,193	47	764	61.9	3.8
광주광역시	1,084	620	593	26	465	57.2	4.2
대전광역시	112	669	646	26	451	59.7	3.4
울산광역시	814	500	483	16	314	61.4	3.2
경기도	7,878	4,910	4,748	162	2,968	62.3	3.3
강원도	1,161	693	679	13	469	59.7	1.9
충청북도	1,160	702	684	18	458	60.5	2.6
충청남도	1,455	921	899	23	534	63.3	2.5
전라북도	1,451	873	852	21	578	60.2	2.4
전라남도	1,489	979	961	18	510	65.7	1.8
경상북도	2,150	1,434	1,398	36	717	66.7	2.5
경상남도	2,380	1,501	1,466	35	879	63.1	2.3
제주도	407	290	285	5	117	71.3	1.7

8) 시도별 경제활동인구, 통계청 홈페이지

(2) 제조업이 취약한 산업구조

광주광역시 2002년 현재 취업자수는 기준 산업기준을 보면 1차산업인 농림어업이 취업자수 비중이 4.8%로 타 광역도시에 비해 월등히 높은 반면 제조업 취업자수의 비중은 전국 평균 19.2%에도 미치지 못하는 13.3%로 나타나 이는 7대 광역시 중에서 대전광역시 다음으로 낮은 제조업의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다. 생산액 기준으로도 제조업이 비중이 전국평균보다 낮다.

〈표 15〉 광주·전남 산업구조⁹⁾

구 분		농림어업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취업자수 기준	전 국	9.3	19.2	71.5	7.9
	광주광역시	4.8	13.3	81.9	9.8
	전라남도	34.3	7.9	57.8	5.6
생산액 기준	전 국	4.4	33.8	61.8	8.9
	광주광역시	1.6	27.6	70.8	8.9
	전라남도	15.0	33.4	51.6	10.6

(3)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지역총생산액

광주광역시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9,313천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아,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15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평균 1인당 지역내총생산을 100으로 할 때 약 2/3정도에 불과하며, 전남은 109를 나타낸다. 반면 소득수준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1인당 민간소비지출은 광주가 전국 16개 시도중에서 14위를 차지하고, 전남은 최하위를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광주·전남은 전국에서 소득이 가장 낮은 지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4) 타 지역에 비해 최하위의 재정자립도

2004년 현재 광주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59.8%로 7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으며, 전남의 경우 21.1%로 전국에서 최하위를 나타내어 타 지역에 비해 국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자체적으로

9) 2003 시정주요 통계, 광주광역시

지역개발이나 경제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형편이다.

3. 현재 광주·전남 지역의 핵심전략산업 현황

산업 세세분류를 통한 광산업 관련(광통신, 광정밀기기, 광원응용, 광정보기기, 광소재, 광학기기) 사업체는 2001년 전국 4,990 여개 사에 17만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약 58조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광주 광산업은 현재 총 190개 업체가 집적하고 있으며, 대기업이 2개사, 중소기업이 188개 사가 입지하고 있다. 190개 업체 중 광통신분야 20%, 광원분야 23%, 광정밀분야 19%, 광소재분야 18%로 86%가 광통신, 광원, 광정밀, 광소재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광주광역시는 기계 및 장비제조업이 광주시 전체 제조업의 생산액은 24.4%, 종사자수는 19.4%로 매우 높게 차지하고 있다. 이는 가정용 기구제조업 일명 가전사업이 큰 비중을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전산업은 전국 출하액의 15.2%를 점하여 경남, 경기도에 이어 3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가전산업이 집중된 원인은 대우일렉트로닉스, 심성광주전자, 캐리어 등 대기업의 생산공장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첨단 부품소재의 산업

광주지역의 중소부품업체의 집적화는 기아자동차와 가전제품제조 대기업의 입지에 따른 협력업체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기술수준이 낮은 저부가가치 부품생산에 놓여 있는 것이 향후 경쟁력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이다. 이처럼 저부가가치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은 대기업의 의존도가 높아 기술개발보다는 대기업의 주문에 안정적인 납품을 원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첨단부품소재에 대한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2) BT 산업

전남지역은 음식료품 업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로 농수산물가공업종으로 영세하고 단순가공의 저부가가치 업종이며, 해안가의 어촌지역과

내륙의 농촌지역에 집적하고 있다. 전남권 소재 생물산업 관련기업들은 대다수가 진정한 의미의 생물산업 기업체라기보다는 사실상 농업기반을 활용한 농산물가공업 및 식품가공업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에 의하면 광주·전남지역에 입지한 생물산업은 생물식품과 화학에 집중되어 있다. 생물식품에 종사자수 기준으로 88.6%, 생산액 기준으로 63.2%가 집중되어 있고, 생물화학에는 각각 10.1%와 36.4%가 집중되었다. 생물의약과 생물환경의 275개 업체는 광주시와 광주근교권에 거의 입지해 있다.

(3) 신소재/조선산업

전남지역의 신소재 관련 업종현황을 보면 비금속광물 업종은 주로 도자기, 레미콘, 기와, 벽돌, 블록, 석재 등 도자기와 기초적인 건축자재생산 업종에 집적화 되었다.

석유정제, 화합물 및 화학제품 업종은 호남정유공장의 석유정제와 기초화학물 제조업,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1차금속은 광양제철의 제강과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강재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타 운송장비제조업은 선박 및 보트 건조업에 집적되어 서남해안 도시(목포, 여수 등)에 집적되어 있다

(4) 핵심전략산업의 현황 종합

현황분석을 통해 종합해 볼 때 광주의 전략산업은 산업발전단계에서 진입기에 있다. 광주광역시와 가전산업 및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부품소재산업은 대기업과 협력관계 속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있어 점차 기술개발로 정보가전 및 첨단부품소재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내부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광산업은 1단계 집중투자로 벤처 및 중소기업으로 집적화 되어 있으며, 혁신여건도 마련되었다. 향후 기술혁신투자에 집중하면 본격적으로 마케팅에 들어가게 되어 특화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 신소재산업은 1차 가공 기초소재 산업에 대기업이 입지하고 있지만 철강, 화학, 요업, 시멘트 등 기초소재를 2차 및 3차 가공의 신소재산업 기업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기업유치와 기업창

업화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조선산업은 삼호조선을 비롯하여 소형 선박을 건조하는 중소기업이 집적되어 있어 기술혁신을 통한 조선산업클러스터 형성 잠재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물류 및 문화. 관광산업은 현황분석을 생략했지만 아직 산업체로써 기업의 형성이나 집적화는 이루어지지 못한 편이며, 벤처기업이나 영세업체들이 디자인, S/W, 문화콘텐츠에 진출하는 수준에 있다.

따라서 광주·전남의 전략산업은 산업클러스터를 위한 기반형성이 우선 중요하며, 특히 대학의 기술 혁신을 통한 신규 기업창업이나 기업이전, 기업유치 등이 시급한 과제라 생각한다.

4. 현재 개발촉진지구(전남지역) 사업 현황

(1) 1차지구(사업기간 1996~2008년)

· 신안, 완도 - 다도해 해상국립공원과 연계한 청해진 국민관광지 조성 및 연도·연륙교사업 추진

(2) 2차지구(사업기간 1998~2005년)

· 곡성, 구례 - 섬진강 주변, 국립공원을 연계한 유원지, 온천개발 및 버섯 등 특화산업 유치

(3) 3차지구(사업기간 2000~2008년)

· 장흥, 진도 - 청정지역을 연계한 지역특화산업육성 및 해양레저관광 단지 조성

(4) 4차지구(사업기간 2000~2005년)

· 보성, 영광 - 해양관광자원 연계성 강화로 관광자원 개발의 활성화

(5) 5차지구(사업기간 2002년~)

· 화순, 강진 - 지역고유문화를 활용한 관광상품, 농업지원

제2절 광주·전남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방안 제시

1.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지역민들은 신산업으로 광산업과 생물산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광산업은 기업체 수가 늘어나고 매출이나 고용효과도 크다. 경쟁력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정부지원이 있어야 한다. 1단계 사업에서 구축된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생물산업은 의약품생산이나 농업과학화를 가져오는 부수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만 관련 기업이 이 지역에 취약한 것이 문제다.

생물산업은 다른 지역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특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한다. 우수한 연구인력과 인프라가 구축되고 클러스터가 이뤄지고 행정과 금융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철강과 화학 등 기존지역의 기간산업도 정보화와 접목되어야 한다.

2. 재래시장과 유통시장 개방의 대책

대형유통업체가 지역에 진출하면서 재래시장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래시장이 살아남기 위한 대안은 무엇이며 유통시장 개방에 대비한 대책은 신세계의 경우 이 지역에서만 1천600여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거두고 있다. 유통도 국가기간산업과 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국내 유통업체들이 시장개방에 대비하지 않았다면 웰마트와 같은 초대형 외국계 유통업체에 안방을 내주었을 것이다. 재래시장 혼자서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 대형유통업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 유통시장에 관한 노하우나 인력육성도 필요하다면 대형유통업체가 지원할 수 있다.

유통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재래시장 현대화가 큰 과제다 정보화시대에도 대비해야 한다. 재래시장은 반드시 살려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을 제한해 재래시장을 육성하고 있다.

3. 지방금융업계의 대비책

지방금융업계도 개방에 대비해야 한다. 광주은행의 대비책은 진출하지 않고 있다. 시티뱅크가 한때 진출하려다 포기했다. 역설적으로 지역시장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일 수도 있다. 무역업계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방은행을 가능한 이용할려고 해도 외환과 국제업무가 취약해 부득이 시중은행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광주은행도 외환 관련 인력과 기능을 강화해달라는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고장 만들기 운동까지 벌이는 등 각 지자체마다 투자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점은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업체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기업과 기업인을 존중하는 지역민들의 마인드가 조성되어야 한다. 정보통신인프라를 갖추고 관련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여건도 중요하다. 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법인세인하, 금리인하도 한 방안이다. 기업인들도 투명한 경영으로 국민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4. 인력양성 육성방안

인력양성문제를 빼놓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논의할 수 없다. 현정부는 지방대학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지역인재의 수준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대학 4년간 배운 것을 회사에 입사해서는 17%로 밖에 활용하지 못한다는 통계가 있다. 생물산업이나 광산업에 맞는 특성화교육을 통해 필요한 인재를 만드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R&D)특구'와 관광특구 등의 수요를 위해 금년도에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방대학이 산학협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대학·연구소·기업을 연계하는 5년 단위의 '산업집적 활성화 기본계획'을 금년 9월에 수립하고 지

역산업체로부터 커리큘럼 내용, 소요인력 등을 미리 주문받는 ‘주문식 교육제도’를 지방대학에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지방대상 사업은 지자체와 지방대학, 지방소재 기업이 과제 선정과 수행 단계에서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수업적 평가시 산학협력 실적을 포함하고, 산학연구 전담 교수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제Ⅳ장 광주·전남 지역경제 핵심전략산업의 비전

제1절 지역경제핵심전략산업 발전 비전

광주·전남지역은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수산업의 중심지역으로 남아 상대적으로 지역발전과 산업발전이 낙후되었다. 물론 일부 대기업이 입지하게 됨에 따라 대기업에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농수산업에 기반한 영세한 전통산업이 지역산업경제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21세기의 산업경제의 패러다임은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생산요소보다는 지식이 성장의 근원이 되고 있으며, 또한 성장의 지역적 조건도 국제적 교류 및 환경, 문화적 요인을 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때문에 환경이 쾌적하고 전통문화가 살아 있으며 공동체적 사회기반이 강한 지역에서 혁신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지역발전을 설계할 수 있는 그 잠재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광주·전남지역은 동일 경제권으로서 공동운명체이며, 행정구역 경계를 뛰어넘어 지역의 자원을 통합하여 활용하는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동북아 시대 새로운 번영지역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광주는 서남권의 첨단과학, 산업·문화의 중심도시로 건설하고, 전남은 동북아의 물류·관광·신산업의 거점으로 개발하는 상호 협력 및 보관의 비전으로 나아가야 한다.

먼저 광주·전남지역의 공동의 R&D¹⁰⁾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광주지역의 기존 핵심산업인 가전, 자동차, 기계산업 등을 광산업, 디지털정보가전산업, 첨단 자동차/ 부품소재 산업으로 육성하여 광주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전남은 철강, 석유화학과 해양(조선), 음식료품 산업 등을 신소재나 첨단조선산업, BT산업으로 육성하여 전남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한다. 그리고 광주와 전남간의 관계는 중심도시인 광주가 비즈니스 서비스를 공급하고 전남은 휴양·레저 서비스를 공급하며, 또한 광주가 첨단부품을 공급하고 전남은 첨단소재를 공급하는 산업적 분업화가 이루어져 광주·전남의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

제2절 지역경제핵심산업 발전전략

광주전남지역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지역경제의 모든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 보다 효율적인 혁신추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대학의 연구소, 기업을 중심으로 혁신기반 구축과 혁신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셋째, 기업투자유치를 위한 생산기반강화와 입지매력도를 극대화해야 한다. 넷째, 생산기반 강화를 통한 문화, 관광, 물류 등 지식서비스 산업을 육성한다. 다섯째, 자치단체간 경제주체간 상호 협력 교류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은 우선 순위를 정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며 하드웨어보다는 실제 결과를 생산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역점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 산학관민 협력 혁신체계 구축

혁신체계 구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10) Research and Development의 약자(=연구 개발), 연구개발활동을 통해 기업(주력)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며, 상품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선 독자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이는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와 고용안정, 물가 억제로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경영 전략이다.

① 자발적인 공식, 비공식 혁신조직체 육성, 연구회, 학회, 포럼, 협회, 학습동아리 등

② 민주적이고 투명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반 한 신뢰문화 구축

③ 통치(governance)에 의한 관료주의적 통치체계 개선

④ 국내외 교류협력 통한 벤치마킹 등 학습기회의 해외로까지 확대

2) 혁신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

혁신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R&D 투자비중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연구소 등 연구개발기관이나 시설을 유치하고 새로 확충해야 한다.

① 대학의 특성화와 산학협력의 증대 :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② 기업지원기관 확충과 협력 강화 : 기술지원, 기술거래, 경영컨설팅 등

③ 기술개발비 제고 및 연구기반시설 유치 및 확충 : 기초/응용기술 지원, 특화기술선정 및 기술혁신 로드맵 작성, 연구 중심/거점 대학 육성 등

④ 혁신기관의 산학연 협력 극대화 : 지역 R&D 클러스터 구축

3) 기업유치를 위한 생산기반 강화와 입지매력도 증대

비전을 실현하는데 가장 가시적인 전략은 기업투자유치이며, 광주·전남지역과 같은 생산기반이 낙후된 곳에서는 기업유치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나 입지매력도가 없이는 수도권과 아시아 국가와의 경쟁에서 기업유치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① 산업클러스터 구축 : 디지털 산업단지 구축

② 중소벤처기업 육성 : 기술거래, 기술지원, 금융지원(기업 및 기술평가 체계확충)

③ 대기업 유치로 중소기업 집적화 강화

④ 입지매력도 증대 : 기반시설 확충, 주거·문화·교육·복합도시개발
(기업도시 유치)

4) 생산기반 강화를 통한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인구규모가 적어 자체적인 시장형성이 미흡함으로써 생산기반을 강화하여 자체적인 수요를 창출하고 또한 생산기반 강화를 통해 국내외 지역과 교류를 활성화한다.

① 전통문화와 첨단기술 접목을 통한 문화중심도시 조성

②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매력도 증진과 관련한 사업 역점 : 관광혁신체계 구축

③ 로컬 수출입 물동량 증대를 통한 광양항 물류거점 활성화

5) 자치단체간 경제주체간 네트워크 강화

혁신자원이 빈약한 낙후지역일수록 광역적으로 네트워크를 이뤄 추진해야만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① 행정구역경계를 초월한 협력사업 추진

② 국내외 및 지역간 교류활성화를 위한 정보망 통합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구축

③ 경제 주체간 교류활성화

④ 초광역 혁신사업의 발굴 및 육성

제3절 핵심전략산업의 한계와 과제

1. 핵심전략 산업 육성 방안

(1) 광산업 육성방안

① 1단계 사업에서 구축한 혁신기반을 활용하여 광제품 생산 촉진

② 수요자 중심의 기술개발이나 인력양성, 기업지원을 위한 클러스터

형성

<표 16> 광산업 육성을 위한 중점사업

분 야	세 부 사 업
기술혁신사업	(1) 차세대 광반도체 소재/부품/시스템 기술개발 (2) 차세대 광통신부품/시스템 기술개발 (3) 광응용제품 개발지원
생산기반사업	(1) 반도체 광원 시험생산 지원 (2) LED 신호/조명 시스템 시범 구축 (3) 광통신부품/ 서브시스템 시제품 생산지원
클러스터 형성사업	(1) 광부품 시험·인증·신뢰성 평가지원 (2) 해외마케팅 지원, 창업보육지원사업 (3) 광산업 기술인력양성지원 사업 (4) 해외우수인력 및 기업유치 지원

(2) 디지털 정보가전산업 육성방안

- 디지털 융합 정보가전산업 기반 구축
 - 기반기술 및 핵심 요소기술을 확보하고 개발하기 위해 기업을 지원하는 연구소 및 연구센터의 확충과 유치
- 정보가전 기술혁신 역량 제고를 위한 산학연 네트워크 추진
 - 첨단 정보가전분야를 대학에 특화시키고, 디지털 기술융합 정보가전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
 - 정보가전 핵심전자모듈 설계분야 인력양성과 광산업과 융합한 전문연구인력을 양성
- 디지털 융합 정보가전산업 클러스터 조성
 - 기존 가전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디지털 융합 정보가전산업의 특화

(3) 자동차/첨단 부품소재산업

- 산학연 협력 기술혁신시스템을 구축하여 핵심 원천 기술력 및 인력 확보
-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추진체계 구축하여 클러스터 형

성

(4) 디자인/문화산업 육성방안

- 광주디자인센터를 중심으로 디자인산업 클러스터 구축
- 첨단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예향 광주·전남의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5) 지역혁신 인프라 조성 및 확충

-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지원센터 기능의 혁신인프라 구축
- 지역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인프라 구축
- 문화수도 조성 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보통신망 구축

(6) 생물산업 육성방안

- 생명공학 기술개발 기반의 강화
- 복합단지형 클러스터 개발 : 생물산업 관련 업체의 입주 후 각종 서비스지원업체 입주
- 집적화 거점 확대 : 광역집적지 조성하여 주변지역과 연계 강화
-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식품, 화학, 소재산업에 IT, BT, DT(디자인) 접목
- 관련 인프라 확충 및 연구개발 상용화 촉진 : 제조업 지원서비스 기능 연계, 자금확보 및 중재기능 강화
- 각종 지원센터의 우수센터화

(7) 신소재/조선사업 육성방안

- 기존 관련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현장애로기술 해소,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촉진, 기업간 연계 강화
- 공공부문 및 대학 주도의 연구개발기반 확충
- 생산기반 집적화 및 협동화 : 신소재·조선관련 입체적 창업 확대 및 관련 국내의 업체 유치
- 지역혁신체계 구축 : 이미 개발된 기술의 활용과 신기술 개발을 위

한 기술혁신체제 구축

- 신수요 창출 : 수요를 창출·리드하는 제품 차별화, 사업다각화, 산업발전 환경조성
- 전략적 수출산업화 : 중소형 선박의 전략적 수출산업화 환경 조성, 주력선종의 전문화

(8) 물류산업 육성방안

- 항만클러스터를 통한 항만활성화
- 항만시설의 조기확충 및 배후단지 물류거점화
- 국제적 물류지원체계의 구축
-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광양항, 목포항 등의 이용물동량 확충
- 무안 국제공항의 물류단지 및 화훼수출 터미널 건설
- 국제적 물류단지와 지역 내 물류시설의 연계 강화 : 내륙복합화물터미널의 기능 강화

(9) 문화·관광산업 육성방안

- 경쟁력을 갖춘 문화·관광컨텐츠 개발
- 문화관광산업 클러스터 혁신체제 구축
- 차별화, 특색화를 통한 전남 문화관광상품 개발
- 국제적 해양관광단지, 거점관광지 조성 등으로 관광인프라 구축

2. 비전 실현의 한계와 과제

지역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각 경제 주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발전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업투자유치가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기업입장에서 보면 기업은 투자를 할 때 세계적 입지측면에서 검토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지가, 인건비 등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또한 인구가 적기 때문에 자체 시장이 협소하다. 경제활동의 중심지역인 수도권과 거리가 멀고, 수도권 집중으로 입지환경이 열악하

다. 그리고 종사자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으며 우수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결국 첨단기술 기업은 수도권을 선호하게 된다.

둘째, 인구가 자녀교육과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몰리다 보니 부의 축적이 떨어진다.

셋째, 정부는 인구가 적고 경제력이 취약하니까 공공 기반사업 건설에서 우리 지역은 항상 효율성에 밀리며 우선 순위에서 처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시설을 확충해도 운영비를 지방에서 감내하지 못해 운영이 부실화되는 현상을 들어 지방의 기반시설 확충의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제 V 장 결 론

광주·전남지역 핵심전략산업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을 대폭 증액시키고, 지방에 배분하는 예산실링제를 통해 포괄적으로 예산을 부여하고 지방이 지역혁신발전계획이나 혁신협의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재정분권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기업유치 및 관광객유치, 그리고 마케팅은 광주·전남이 통합추진기구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스템적이고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공동적으로 추진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추진기구들이 역할을 분명히 하고 종합적 시스템 속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혁신추진시스템 구축에 보다 많은 연구들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드웨어 구축보다는 OUT-PUT이 나올 수 있는 관리운영 및 추진이 효율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각 지방단체는 기업과 종업원, 관광객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역을 매력있게 가꾸는 사업과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에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 이는 향후 기업 및 인력 유치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 등의 산학연 협력사업에 보다 많은 투자가 필

요하다. 기업도시로 성공한 도시들의 특징은 지역 내의 산학연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공동연구 및 상호협력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지양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통해 산업을 진흥시켜야 한다. 특히 창업기업 및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금융권의 투자가 필요하며, 금융권은 기업의 경영과 기술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하여 지원 할 수 있는 평가능력을 확충해야 한다.

성공적인 기업도시는 규제가 없고 기업활동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된 기업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지자체마다 기업을 지원하는 전담부서를 두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노사분규가 없는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참 고 문 헌

- 강석천 외(1994), 「지방경영시대」 서울 : 조선일보사
- 김기덕(1998),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 김경숙(1998),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 김선기,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V.218
- 박인호(1984),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지방행정」 서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소병구(1993), 「지방행정론」 서울 : 형설출판사
- 심정근(1981), 「지방재정제도론」 서울 : 법문사
- 이정훈(2001),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지역경제난의 극복방안” 석사학위논문
- 임형섭(1996) “지방특화산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 오연천(1993), 「한국지방재정론」 서울 : 박영사
- 여상일,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V. 237
- 윤태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민간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 「지역과정책」 창간호
- 정세욱(1995), 「지방재정학」 서울 : 박영사
- 최유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한국은행 전남본부·광주전남발전연구원(2004), “지역경제 핵심전략산업의 현황과 비전”
- 조병익·민준기(2004), “지역경제 관련 주요제도 현황”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반 연구보고서」
- 한표환(1998),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규제완화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